

어른의 책무



데스크칼럼

노병하
사회부장
bhn@jnilbo.com

“저희도 할 만큼 했습니다. 만약 기사에 저희 병원을 지목하는 단어들만 명시되면 그만이지 않을 겁니다.”

취재를 했던 기자로부터 해당 병원의 입장을 들었을 때, 화가 나기보다는 안쓰러웠다. 그들이 아동바등하며 이끌어온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1월이었다. 사회부원 한명이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이 모인 병원에서 대안학교를 운영 중인데,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게 됐다”고 보고했다.

호기심이 들어 세부 보고를 받았다. 정리하자면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병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관계기관의 지원이 부족했다. 그래서 병원도 오랜 고민 끝에 더 이상 위탁교육을 안하기로 한 것이다.

몇 명이냐고 물었더니 30여명이라고 했다. 솔직히 가성비 없는 취재였다. 비리나 사고, 사망 등의 내용이 아닌데다 다수가 피해를 본 사안도 아니다. 심지어 이런 대안학교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공통의 관심사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취재는 신중하고도 시간이 걸렸다. 아픈 아이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쉽지 않고, 위탁교육을 해지하는 병원의 협조도 당연히 얻을 수 없었다. 협조는 고사하고 소송 이야기를 꺼낼 정도로 그들도 지쳐 있었다.

어렵고 품은 많이 드는데, 파장은 예

측할수 없다. ‘과연 이 기사를 쓰게 해야 하나’ 담당 부장으로서 고민이 생길수 밖에 없다.

상황은 갈수록 급박했다. 아이들은 곧 병원에서 나가야 했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광주시교육청은 다급해졌다. 지역의 큰 병원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모두 거절했다. 결국 고민 끝에 취재를 허락했다. 두명의 기자가 투입됐고 그들은 훈련 받은데로 신중하고 신속히 움직였다. 또 단톡방을 따로 만들어 해당 사항에 대한 보고를 수시로 받았다. 매일매일 여러 이야기가 올라왔다. 그렇게 이 주일이 흘렀다. 두명의 부원이 매달리다 보니 다른 부원들의 하중이 커졌다.

한 부원이 물었다.
“시리즈로 가실 건가요?”

“아니”
“사회면 톱 하나에 이주일은 너무 가성비 없는데요.”

“안다.”
이런 결정을 왜 했을까? 그것은 우리 모두 ‘어른’이기 때문이다.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어떤 이유(왕따, 가정폭력, 성폭력)로 정신적 질환을 앓게 되는 아이들이 모여 서로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곳이 있었다. 어느 날 그곳이 갑자기 사라진다. 더욱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려 한다.

이런 사실을 사회부 기자가 알았다. 그렇다면 가성비고 무엇이고 간에 ‘적어도 어른들이 아이들은 지켜야 하지 않나’라는 당연한 명제를 떠올리게 마련이다.

아이들을 지키는 것. 아이들이 돌아갈 곳을 만들도록 촉구하는 것 말이다.

다행히 편집국장은 보고를 듣고 1면,

2면, 3면에 게재하는 대형 기획인 ‘일주이슈’로 가져갔다. 솔직히 그 순간 눈물나게 고마웠다.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과감하게 지시한 선배에게 감사를 표하며 부원들에게도 알렸다. 모두들 ‘캔슬’ 될 줄 알았는데 ‘판’이 커지자 환호했다.

오래 준비한 만큼 기사는 수월하게 나왔다. 아이들의 이야기, 병원의 이야기, 시교육청의 이야기, 타 지역의 해법 등 내놓을수 있는 것은 다 내놓았다.

그리고 기적이 발생했다.

광주성요한병원이 지역 내 정신건강 위기학생들을 품어주겠다는 뜻을 시교육청에 전해 온 것이다. 광주기독병원도 새로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되어 주겠다고 나섰다. 또 지난 14일 광주시의회에서 광주와 전남지역 내 정신건강 위기 학생을 치료·교육해 줄 ‘병원형 위(Wee)센터’ 관련 대안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됐다.

이귀순 시의원은 “대안교육 위탁기관의 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교육청 관계자들이) 많이 고생했다”며 “다만 공백기간이 없이 바로 새로운 기관이 나타나 주었다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또 병원형 위센터가 접근성이 높은 서부 쪽에 추가로 더 문을 열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됐으면 한다. 필요하다면 의원들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그래,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닌 내용이다. 그냥 어른들이 아픈 아이들을 지켜낸 것, 그게 이 이야기의 전부다. 그럼에도 이리 길게 풀어 말하는 것은 그 아이들이 취재기자에게 했던 부탁을 들어줄 수 있어서다.

“여기 친구들과 다시 또 만날 수 있는 거죠?”

社說

횡령혐의 수사 의뢰한 단체에 위탁이라니

광주시 안일 행정 도마위

광주시가 자체 감사를 통해 수억원대 횡령 혐의가 포착돼 수사를 의뢰한 단체에 보조금 사업을 다시 맡겨 비판의 도마위에 올랐다. 전남일보 취재와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관광협회는 올해 관광안내소(5억원), 관광두레 지역협력센터(4억원)를 시로부터 각각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한데 수탁기관 선정 과정이 납득 불가여서 유감이다. 지난해 10월 시와 관광협회간 체결된 관광안내소 위탁 계약은 광주시가 같은해 9월 감사를 통해 보조금 7억원 가운데 5억7000만원을 운영 경비로 돌려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이후에 진행된 점에서 문제가 아닐수 없다. 경찰은 최근 협회 관계자와 민간인 등 2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광주시의 관광협회 보조금 사업자 재선정은 민간위탁 관련 조례와도 배치된다. 광주시 민간위탁 조례 제13조는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수탁기관의 위탁계약이 해지된 업체는 민

간위탁 대상기관의 자격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를 통해 횡령을 의심해 수사 의뢰까지 한 단체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가 상식적인 행정 처리일 것이다. 그런데도 광주시는 위탁 대상 기관 자격에 결격 사유가 드러난 단체에 9억원대 보조금 사업을 다시 맡겼다. 지나치게 안일한 행정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귀순 광주시의원은 “광주관광은 관광협회가 전담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광주시의 관광협회 의존도가 높다”면서 “횡령 의혹을 확인하고서도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하는 것은 고양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진배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지역내 관광협회를 대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과 단체가 없어 어쩔수 없어서 수탁기관으로 재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는데 관광협회가 10년 넘게 광주 관광 위탁사업을 독식해 온 것이 이번과 같은 온정주의 행정으로 기울어지는 요인이 됐다고 판단한다. 광주시는 오는 8월 출범하는 광주관광공사에 관광안내소 운영사업을 이관할 예정이라하니 부끄러운 광주관광행정에 마침표를 찍기를 기대한다.

유명무실 농업인 월급제, 대안 마련해야

작목 확대 해도 참여율 저조

전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농업인 월급제가 유명무실하다고 한다. 제도 개선과 함께 폐지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금 우리 농촌은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밥상용 쌀마저 수입되는 최대의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겠다며 광역 자치단체로는 처음 실시된 농업인 월급제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니 안타까운 일이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농업인 월급제 확산을 위해 벼를 비롯해 기존 14개 작목 외에 무화과를 추가해 대상 작목을 15개로 확대했다. 하지만 신청 농업인은 지난해 3500명, 올해도 최대 4000여 명으로 예상되는 등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전체 농가 수 대비 신청률도 최저 2.6%에서 최대 2.7%에 불과하다. 그나마 전남에서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나주시 만 지난해 930명이 신청해 전남 전체 신청건수의 26.57%를 차지했다.

농업인월급제는 수확 전까지 매달 일정액을 농협이 농가에 선 지급한 후 수매대금에서 빌려준 돈을 차감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월급으로 지급하는 자금에 대한 기간 이자는 전남도와 시·군이 농협에 보존해 준다. 농가 입장에서는 무이자로 수매대금을 앞당겨 빌려 쓸 수 있어 비수기 농가 경영자금과 생활자금 마련에 숨통을 틔워준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후 소득을 선 지급 분배하는 것으로 실제 농가 소득을 높이는 방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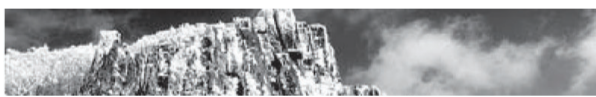
농사를 지어봐야 빚만 남는다는 현실에서 농정 최대의 과제는 농가 소득의 안정이다. 그렇다고 비수확기 현금 없는 농민의 애로점을 보충해주는 조삼모사(朝三暮四)식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기는 어렵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가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농민수당의 인성과 변동형 직불제의 부활도 고민해야 한다. 기초농산물에 대한 국가수매나 농민기본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이 이끄는 연구팀은 최근 베토벤의 머리 카락에서 유전체(게놈)를 분석해 그의 사인이 그간 알려졌던 납중독이 아닌 간경변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본=AP/뉴시스**

서석대



윤석열 정부 들어 전국 유명산에 케이블카 설치 추진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최근 환경부가 국립공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리면서다. 광주 지역 일부 단체도 최근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데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20일 출입기자와의 차담회에서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 추진 계획은 아직 없다”고 뜻을 밝혔다. 강 시장은 “무등산 군부대 이전과 정상 복원을 우선 고민하고 있다”며 “이전·복원이 끝나면 기존 군용 도로에 대한 (활용·원상 복원 등) 문제가 필연적으로 제기될 것인데, 일단은 그런 문제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공군, 국립공원공단과 협의해 오는 9월을 목표로 무등산 정상 상시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가 정상 부위에 주둔한 방

무등산(케이블카)

부가 굳게 잠긴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의 빚장이 풀리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동안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했다가 제동이 걸린 지자체들이 재추진을 가속화하고 있는 중이다. 30년 넘게 제자리걸음이던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를 비롯해 2차례나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했다가 실패한 구례군은 신규 연구 용역을 준비하며, 사업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남 산청·함양군도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재추진을 검토하고 있어 이들 지리산권 지자체간 합의의 도출이 사업 추진의 최대 관건이자 난제가 될 전망이다. 이해관계가 다른 이들 지자체가 제각각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립공원의 환경 훼손 이 전국적인 논쟁거리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전국 각지에서 케이블카 사업이 재추진되면서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도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에서는 민선 8기 흥준표 대구시장의 공약 사업으로 팔공산 갖바위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실상 중단됐다. 팔공산에 위치한 동화사 등 불교계와 환경단체가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현재 군공항특별법 달빛고속철 건설, 2038아시아게임공동유치 등과 굴적한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협력과 정책공조를 해왔는데 혹여 무등산에만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일은 없기를 기대한다. 후손에게 전해줄 소중한 자연 유산이 불확실한 경제적 효과때문에 훼손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귀순 논설실장**

全南日報	사창·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기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461	전남취재부	(062)510-0336		
www.jnilbo.com m.jnilbo.com	사회부	(062)510-0340	뉴스콘텐츠부	(062)510-0321		
	경제부	(062)510-0380	사진부	(062)510-0391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 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